SOC 확충 등 산업 혁신 체계 구축에 중점을

- 정부 ‘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 ’의 선결 요건을 점검한다 -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전 · 충청권과 전라 · 제주권, 울산 · 경북 · 강원 등 3개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는 ‘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 안에는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국비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의 ‘ 산업 지도 ’ 완성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전 · 충청권에서는 전자와 생물산업이, 전라 · 제주권에서는 자동차 부품, 기계, 생물산업이, 그리고 울산 · 경북 · 강원에서는 자동차, 전자, 생물산업이 각각 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별 전략 산업 지정은 광주의 광(光)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 기존의 4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전국 차원의 산업 지도가 완성된 셈이다. 정부는 3개 권역 육성 사업으로 2006년까지의 사업 기간 중에만 전국에서 3조 1,000억원의 생산과 3만 4,0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실천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3개 권역에 8,817억원의 국비를 들여 27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2,250억원 규모로 책정된 연구 개발 자금의 절반은 지역별로 배정하되 나머지는 경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 충청권에 3,1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대전의 경우 생물 · 의학 · 화학 · 정보 통신, 충남은 전자정보 기기와 동물 자원, 충북은 전자 부품(오창) · 보건 의료(오송, 제천) 산업이 집중 육성될 계획이다.

전라 · 제주권의 경우 전북은 자동차 부품과 기계, 전남은 생물 농업과 소재, 제주는 자생 식물과 해조류 산업을 각각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여기에 2,8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울산 · 경북 · 강원권에는 2,855억원을 투입해 울산은 자동차 및 정밀화학 산업의 고도화, 경북은 전자정보기기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생물산업 육성, 강원의 춘천 · 원주 · 강릉 등은 청정 산업 육성에 주로 사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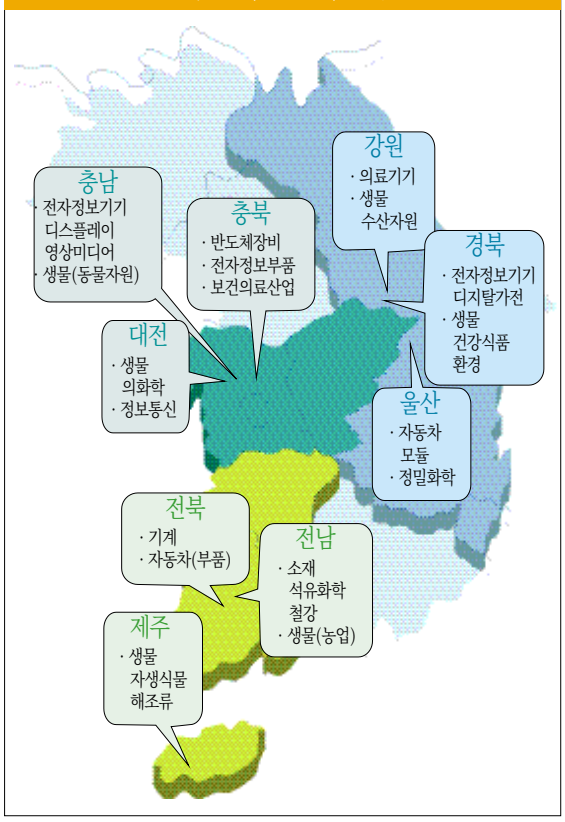
지역 균형 발전에 ‘ 진일보 ’

이번에 발표된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산업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심화 일로를 걸어 왔다.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1995년 41.8%에서 1999년에는 42.9%로 상승했으며, 인구 비중도 45.3%에서 46.2%로 상승했다. 또 3차 산업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52.9%에서 53.4%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같은 기간 중에 43.8%에서 44.2%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 시행해 왔고 산업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 산업 정책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는 ‘ 밀어내기 ’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산업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사업 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에 더 신경을 쓰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밀어내기 정책 자체

3대 권역별 전략 산업



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의 중복 투자도 이번에 산자부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자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보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 등 최근 유행하는 업종만 너도나도 육성하겠다고 나서 중앙 정부의 교통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과잉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시나 도 등 단순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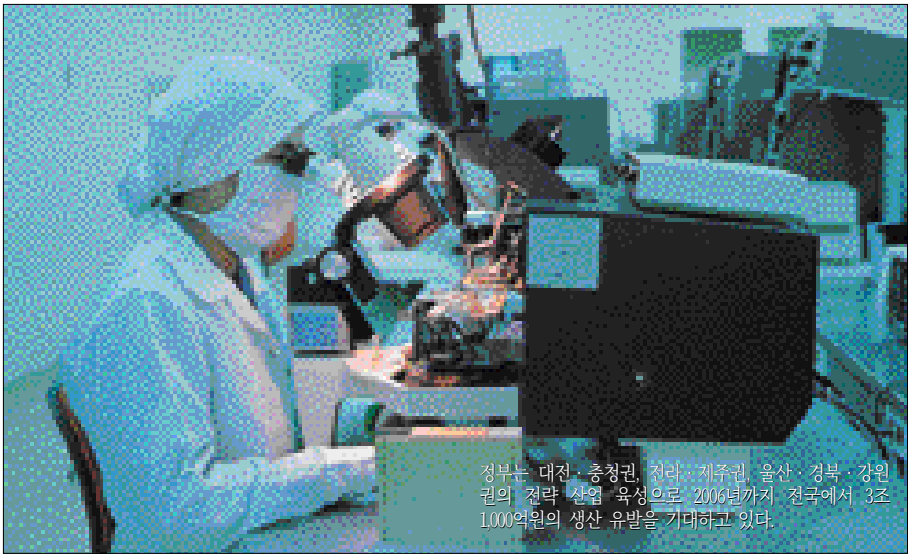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으로 전국적으로 3조 1,080억원의 생산과 3만 4,75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수치보다 지자체의 산업 발전 기획 조정 능력이 배양되는 보이지 않는 효과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 많아

산자부가 내놓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중점 육성 산업의 배치와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이 지자체가 제시한 자율적인 계획안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충분한 교감 형성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산자부가 전국 13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일부 지역은 이미 완료)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의 전략 산업 육성으로 2006년까지 전국에서 3조 1,000억원의 생산 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의 유사 지역 산업 육성 시책이 조정·통합되어야 한다. 지역 산업 육성이 중앙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개별 부처 위주의 분산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수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많다. 또 부처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 시행되고, 정책간 연계성이 결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산자부의 테크노파크나 기술혁신센터(TIC), 과기부의 지역연구센터(RRC), 교육부의 BK21(두뇌 한국) 사업,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설립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조정·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업의 극대화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민자가 적극 투입되어야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지역 산업 육성 시책에 민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도로, 항만과 같은 SOC나 하드웨어와 더불어 통신,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혁신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SOC 기반 구축도

산업 입지 결정을 동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은 어느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는 그 산업만을 집중 발전시켜야 한다는 식의 정태적 사고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인구 이동이나 생산 요소 가격 변동, 개방 정책 등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간 비교 우위 구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서해안의 비교 우위 산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산업진흥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민관 합동 평가 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예산을 신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도모해야 한다. 기존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나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의 광산업 육성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차제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